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목 차>

1.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

금융위원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홍상준
	담당부서 (과)	서민금융과		직급	행정사무관
	국장	윤창호		연락처	02-2100-2612
	과장	하주식		이메일	hongguqaz@korea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12 및 부칙 제2조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P2P대출업자	P2P대출업자 (약 120개)	입법예고	-
	이해관계자	대부업자, 관련협회	대부업자(8,980개), P2P금융협회	입법예고	-
5. 규제 존속기한	없음(지속추진 필요)				
6. 구분 (신설 또는 강화)	신설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P2P대출업을 영위하는 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관리·감독을 강화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12 및 부칙 제2조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P2P대출업체와 연계한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자*로 함

* 금융위 등록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비해 등록요건(자기자본 5천만원 → 3억원 등) 및 적용규제(총자산한도)가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음

<신·구 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조의12(그밖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등) ①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”라 한다)를 말한다.
<u><신 설></u>	1. 대부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(이하 이 영에서 “투자자”라 한다)와 대부를 받으려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차입자”라 한다)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(이하 “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”라 한다)의 중개 행위와 연계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
	2. 그밖에 제1호의 투자자에 준하는 자와 차입자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자의 중개 행위와 연계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건전한 영업이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

1. 규제 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업*과 연계한 대부규모가 단기간내에 크게 성장**

* 다수의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의 'P2P(Peer-to-Peer)대출

** 대출잔액(억원) : ('15.12) 235 → ('16.3) 724 → ('16.6) 1,129 → ('16.9) 2,087

- 투자자·차입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관리·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나,

- P2P대출에 연계된 대부업자는 시·도지사에 등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전문적인 감독이 어려운 상황*

* 시·도지사 감독시 P2P영업 형태에 특화한 감독·지도가 어렵고,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실태관리도 불가능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시장 규모 성장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불건전 영업행위*에 따른 투자자·차입자 피해 가능성**이 증가하고 있어,

* 차입자에 대한 과도추심, 투자자에 대해 P2P대출을 빙자하여 유사수신, 투자자에게 차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등

** (G업체 허위대출 사례) 주유소 관련 사업 대출을 통해 자금을 모집후 대출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로 대표 구속수사 중

- 최소한의 감독근거 마련을 통해 투자자·차입자를 보호 하면서도 P2P대출업이 창의·혁신에 따른 건전한 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☐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들은 금융당국의 관리·감독을 받도록 하여,
 - 투자자 및 차입자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권 금융의 대안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유도

2. 대안의 발굴·검토

가. 고려된 대안

< 별도 법령의 제정 >

- ☐ 대부업법을 통해 P2P대출업을 규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, P2P대출에 관한 별도 법령을 마련

< 비규제대안 : 해당사항 없음 >

- ☐ P2P대출에 대한 법령상 최소한의 관리·감독 근거가 필요하여 비규제대안은 상정하기 어려움

< 규제대안 : 금융당국의 관리·감독대상 편입 >

- ☐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근거 마련

나. 대안의 분석

<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>

- ☐ P2P대출에 대한 감독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상이 아님

< 별도 법령의 제정 >

- 별도 법 제정시 신생 업종에 과도한 진입장벽(물적·인적요건 등)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업계의 성장을 크게 저해할 우려

* 별도 법령 제정시 인적, 물적요건 부과, 다양한 영업규제 및 건전성 규제와 이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필요

- 또한 P2P대출업은 신산업종이고 시장 규모도 아직 수천억 수준에 불과해 별도 법령 제정에 다소 이른 측면

* P2P대출잔액은 2,087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 14.42조원과 비교시 1.5% 수준

<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 >

-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감독근거를 법제화하려는 것임

< 해외사례 분석 >

- P2P대출이 발달한 해외 각국에서도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부정대출, 투자사기 등 문제가 발생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

- (미국사례) '16.5월 세계 최대규모 P2P업체인 렌딩클럽의 부정대출*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고 대표이사가 사임

* 기관투자자 등의 자금유치를 위한 실적확보차원에서 대출자격이 안되는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

- P2P대출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감독기관간 협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백서 발간
- 미국 SEC는 '08.11월부터 P2P업체의 대출채권 판매를 증권 거래법의 공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규제

- (중국) P2P대출의 급성장 과정에서 대출사기*, 중개업체 도산, 고객정보 유출 등 각종 금융사고 빈발

* 업계 4위인 'e쭈바오'는 허위정보로 자금을 모집하여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로 적발

- '16.7월부터 등록의무, 영업 및 투자자보호규제 등 포괄적 규율체제를 마련한 '네트워크 대출정보 중개기구 업무활동 관리 잠행방법(은감위 규정)'을 시행

- (영국) FCA(영업행위 감독)는 '14.4월부터 P2P대출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감독권을 공정거래청(Office of Fair Trading)으로부터 이관 받아 감독업무를 수행

- ☐ 해외각국은 공통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관리·감독 강화를 추진 중에 있음

< 타법사례 분석 >

- ☐ 해당 사항 없음

< 위임근거 검토 >

- ☐ 근거법령 :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6호

< 이해관계자 협의 >

- ☐ '16.7~10월간 P2P대출 T/F*를 구성하여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, 동 규제 관련 특이 사항 없음

* 금융위, 금감원, 금융연, 자본연,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, P2P업체의 추천을 받은 학계·법조계 전문가로 구성

<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>

- 지자체 등록 하에서 금융당국의 전문적인 감독·검사나 투자자·차입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등이 불가능
- P2P대출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전국적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지자체 등록·감독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이 곤란

< 결론 >

-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·감독 하여 업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·차입자를 보호
- 업계 입장에서조차 유사 P2P업체와 차별화하고 대부업 등록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

3. 대안별 비용·편익 분석

- 신생업종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자·차입자 보호 제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법령제정보다 현 규제대안의 편익이 높음
- * 별도 법령 제정시 인적, 물적요건 부과, 다양한 영업규제 및 건전성 규제와 이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필요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

가.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

< 행정적·재정적 집행 가능성 >

-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등록 및 관리·감독 업무는 기존 감독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

< 기술적 집행 가능성 >

- ☐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등록 및 관리·감독 업무는 기존 감독시스템으로 가능하며 기술적 어려움 없음

<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>

- ☐ 해당사항 없음

나.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

<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>

- ☐ 해당사항 없음

< 경쟁영향평가 >

- ☐ 해당사항 없음

< 기술규제 영향평가 >

- ☐ 해당사항 없음

다. 대안 선택 및 근거

- ☐ 해외 규제례, 일부 국내 P2P업체의 투자사기 등 불법사례 감안시 금융당국의 관리·감독대상 편입이 긴요
- ☐ 다만, 신생업종의 성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령 제정보다는 기존 법제 내에서 최소한의 감독 근거를 마련

라.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

- ☐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,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고
 - P2P를 사칭한 투자사기 업체 등은 금융당국의 관리·감독 과정에서 퇴출하여 투자자 등을 보호 제고 기대

마.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

- ☐ '16.7~10월간 P2P대출 T/F*를 구성하여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, 특이 사항은 없었음

* 금융위, 금감원, 금융연, 자본연,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, P2P업체의 추천을 받은 학계·법조계 전문가로 구성